

## USCIRF – RECOMMENDED FOR 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 (CPC)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는 미연방정부 산하의 초당적이며 독립적인 위원회로서, 전 세계의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 실태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1998년에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IRFA)에 의거하여 창설되었으며, 국제 표준에 따라 전 세계 종교나 신념의 자유 침해 사례를 감시하며, 미국 대통령, 미국 국무장관 및 미국 의회에 권고하는 정책안을 마련한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미국 국무부와는 별개의 독립된 조직이다. 2020년도 연례 보고서는 현지에서 자행되는 침해 실태를 정리하여 기록하고 미국 정부에 독립적인 정책 자문을 하기 위한 위원들과 전문 요원들의 작업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도 연례 보고서는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이 기간 전이나 후에 발생한 중요한 사건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본 위원회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202-523-3240 로 직접 연락하면 된다.

### 개요

2019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라고도 알려진 북한의 종교적 자유 실태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나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헌법은 명목상 종교적 믿음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종교를 이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종교를 "자력갱생과 자기 개발"을 설파하는 주춧사상으로 알려진 국가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기독교인들은 특히 취약한데 왜냐하면 북한 정부는 그들이 외세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가가 지원하는 제한된 수의 예배당을 벗어난 모든 종교 행위는 비밀리에 행해진다. 종교 활동을 하다가 잡히거나 심지어 단순히 개인적인 종교적 관점을 가진다고 의심 받는 사람은 체포, 고문, 투옥, 사형 등의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 종교적 문서의 소유와 배포는 여전히 북한법상 형사범죄에 속한다. 체포나 박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북한 지하 기독교인들은 전도 활동을 하지 않는다. [출신성분 제도](#)는 국가에 대한 충성도를 바탕으로 시민을 분류하는데 종교인들은 "적대" 계층에 속하여 교육 및 고용 기회를 비롯한 기타 국가 혜택으로부터 배제된다. 2019년에는 중국에서 시작된 파룬궁 운동이 북한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와 북한 당국이 파룬궁 수행자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도 하였다.

북한에는 [약 8만 ~ 12만 명의 양심수](#)와 "국가의 적"으로 선언한 자들을 수용하는 일련의 정치범 수용소([교화소](#))와

노동훈련소([노동단련대](#))가 있다. 수감자들은 종교도에 시달리고 열악한 생활 환경, 영양실조, 기타 학대를 겪어야만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구금되어 있다고 추정한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수용소에 수감된 기독교인 중 대다수가 정치 범죄의 증거물로 간주되는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국가안전보위부에 체포되었다. 이러한 수용소에서는 예배가 허용되지 않으며 구금된 기독교인들은 감시를 피하기 위해 화장실 안에서 조용히 기도해야만 한다.

한편, 한중 국경 양쪽 당국자들은 부분적으로 해외로부터의 "종교 유입"을 막기 위해 탈북자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다. 2019년 6월 홍콩 시위 이후 중국 정부는 방문자의 신분증을 스캔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한국 선교사와 탈북자들은 국경지대를 돌아다니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중국에서 추방된 난민과 탈북자들이 국외에서 종교나 외국 선교사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이들을 감시하고 있다.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독립된 예배당이 없다. 정부는 여러 개의 국가 후원 종교 단체를 설립하고 5개의 교회가 평양에 운영되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인권단체와 탈북자들은 이러한 기관들이 단지 종교적 자유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 미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 국제종교자유법(IRFA)에 근거하여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감시한 종교 자유 탄압에 관여하는 북한을 "특별관심국"(CPC)으로 지정한다.
- 현재 공식인 북한인권특사를 채용하고, 미 국무부 내 독립적인 정식 직책으로 유지하며 종교의 자유가 해당 직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도록 한다.
- 북한 내 종교 자유를 포함한 인권 실태를 기록하기 위한 국제인권감시단의 제한 없는 접근을 허용하도록 북한 정부에 촉구한다.
- 미국 글로벌 미디어국의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를 통해 당국이 감시하기 어려운 레거시 방송과 비네트워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업 등 북한 내 정보 보급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한다.

미 의회는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 행정부와 협력하여 비핵화에 대한 상당한 진전 및 종교적 자유 실태를 개선한다는 약속의 대가로 2016년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에 따른 특정 제재의 일부 또는 완전한 해제를 의회가 승인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규정한다.

## 주요 USCIRF 리소스 및 활동

- **보도 자료:** [USCIRF Disappointed UN Security Council Did Not Discuss Religious Freedom in North Korea\(USCIRF,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종교 자유를 논의하지 않은 것에 실망\)](#)
- **보도 자료:** [USCIRF Urges President Trump to Address Religious Freedom Abuses in North Korea\(USCIRF, 북한 종교 자유 억압 문제 해결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에 촉구\)](#)

## 배경

북한의 종교 통계와 종교의 자유에 관한 정보는 확인하기가 어렵고 오래되어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다. 북한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불교와 천도교(하늘 길의 종교)로 알려진 토착 혼합 종교 운동을 추종하였으며 이들은 현재 인구의 4%와 14%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 전쟁 이전에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알려진 평양에 상당한 규모의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했다. 잇따른 단속으로 인해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북한에 남아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1990년대 중반 엄청난 기근을 겪은 후 중국으로 망명했을 당시 이 종교에 대해 알게 되었다.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점술과 같은 전통적인 미신이 널리 퍼져 있다.

## 탈북자와 난민

북한을 떠나는 탈북자와 난민들은 북한의 종교적 자유 실태에 대한 주요 정보원들 중 하나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남한으로 넘어오는 북한 사람들의 수는 탈북자와 난민 모두 감소하였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2019년에 1,047명의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망명하였는데 이는 18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였다. 또한 일부 인권 옹호론자들은 모든 탈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지난 11월, 동료 선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어민 2명이 한국으로 도주했다. 한국의 법은 탈북자를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들을 추방하였으며 일부 인권 단체들은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주장하였다.

중국 정부는 모든 탈북자들을 불법 경제 이민자로 간주하고 송환 시 탄압을 받을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발각될 경우 이들을 추방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1951년 채택된 유엔의 난민협약(Convention on Refugees)과 1967년 의정서 당사국인 중국의 명백한 의무 위반이다. 2019년 초, 중국 정부는 일제 단속을 통해 수십 명의 탈북자를 검거하였으며 "지하 철도"로 불린 브로커, 자선 단체, 중개자들의 비공식망 중 일부를 붕괴시켰다.

또한 2017년 이후부터 북한 탈북을 도운 한국 선교사 수백 명을 추방하기도 하였다.

## 유엔 활동

2019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을 상대로 반인륜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북한 관료들의 향후 검찰 수사에 활용될 정보 수집 및 전략 개발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5월에는 북한에 대한 제 3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 대표단이 이사회에 앞서 북한의 종교 및 신앙 탄압을 규탄하였다. 북한 정부는 신자들이 독자적으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권고안을 수용했다고 밝혔지만 나머지 권고안은 인권 실태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지난 10월,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전반적인 인권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에 인권 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북한 정부는 2019년 내내 특별보고관의 방북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였다. 12월, 유엔 총회는 북한의 종교적 자유와 인권에 대한 "오랜 기간에 걸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위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 미국의 핵심 정책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났지만 제재 완화에 관한 이견으로 인해 정상 회담은 결렬되었다. 6월, 두 정상은 한국의 문제인 대통령과 함께 관문점 비무장지대에서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었고 미국 대통령 최초로 북한 땅을 밟는 역사를 썼다. 그러나 협상 시한을 넘기도록 안보 관련 협상에 진전이 없어 북미 관계가 악화되었다. 12월, 미 의회는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P.L. 116-92)에 명시된 대로 오토 워이버 대북 은행 규제법(S.667)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이에 서명하였다. 이 법은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 기관에 대해 2차 제재를 가한다.

2019년 내내 미국 정부 관료들은 계속해서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부가 주최한 제 2차 종교자유 선진화 자료회의의 일환으로 2012년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의 기독교인 주일룡과 만남을 가졌다. 11월,

미국 글로벌 미디어기구는 북한과 같은 국가에서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OTF\)](#)를 출범시켰다. 12월, 미 의회는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한 400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포함하는 지출 법안([P.L. 116-94](#))을 통과시켰으며 대통령은 이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12월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이러한 논의는 "심각한 도발"에 해당한다고

경고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인권 기록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제로 올리려는 노력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18일, 국무부는 IRFA에 따라 북한을 CPC로 [재지정하였으며](#) 1974년 무역법 제 402조 및 제 409조에 의거하여 관련 대통령 조치로서 이미 북한에 적용 중인 제재 조치들을 다시 부과하였다.